



새사연의 연구가 한국 사회의 기준이 될 때까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시민의 삶에서 출발합니다.

## 시민주도 싱크탱크 새사연

## [잇북]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발행 | 2015년 9월 18일

지은이 | 박세길

펴낸이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주소 | 서울 마포구 독막로 229길 민한빌딩 4층

전화 | (02) 322-4692

팩스 | (02) 322-4693

홈페이지 | <http://saesayon.org>

전자우편 | [edu@saesayon.org](mailto:edu@saesayon.org)



## 들어가기

안녕하세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몇 달 전, 박세길 작가의 신서가 나오자 새사연에서는 "한국 현대사" 라는 주제로 북세미나를 연 적이 있습니다. 21살의 대학생부터 민주화 운동 시대를 살았던 박세길 작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놀랐던 사실 중에 하나는 2015년 같은 시공간에 존재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험으로 인해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인식이 천차만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예를 들자면, 제가 체감하는 가장 큰 사건은 'IMF 금융위기' 입니다. 그 때 아버지께서 실직을 하시고, 수학 여행을 못 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현재 대한민국의 꼴을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IMF 금융위기를 21살의 대학생은 그냥 교과서의 한 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의 경험을 듣고 나서야 겨우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문득 이 경험의 간극에 대한 충격을 유신시대, 민주화 운동을 겪은 세대들은 똑같이 저에게 느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분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고, '마냥 비판하기보다는 그 시간들을 알아보고자하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있을까요? 알고자 노력은 했을까요?

본문의 내용들은 다음 뉴스펀딩에 올라왔던 박세길의 '청년들을 위한 역사는 따로 있다' <sup>1)</sup>를 재편집한 것으로 현재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부동산' '노동' '정치' 등의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한국 현대사' 속에서 풀어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이 앞서 산 세대들이 보내는 '화해'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기성세대가 당시의 삶을 이야기해주며 화해를 권하는 '편지'같은 마음으로 읽어주시길, 기성세대들은 '요즘 아이들' 이라는 생각보다는 청년들의 현 모습을 정확히 바라보고자하는 '열린마음' 으로 읽어주시길 권해봅니다.

일주일 뒤면 한가위입니다.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에 같이 있을 취업, 결혼, 미래,

1) <http://m.newsfund.media.daum.net/project/231/episodes>



정치 등의 수많은 갈등들 때문에 마냥 기쁘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알고 이해하고자하는 마음으로 오가는 길에 일독하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갈등과 분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분명 따로 있을 테니까요.

**2015.09.18.**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미디어회원센터**



## 목 차

들어가기 .....	2
1. 우리는 어쩌다가 청년들에게 대단히 가혹한 사회를 만들었나? .....	5
2. 2003년, 달콤 씹싸름한 플라스틱 머니의 유혹 .....	9
3. 민달팽이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동행은 가능한가? .....	13
4. 위장취업과 학력세탁의 현대사 .....	19
5. 왜 청년들은 노동운동 밖으로 밀려 났는가? .....	24
6. 투표율 낮다고? 희망은 청년들이다 .....	29
7.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	34



---

<박세길의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1>

## 우리는 어찌다가

### 청년들에게 대단히 가혹한 사회를 만들었나?

---

#### 한국은 청년들에게 유독 가혹한 나라

제목을 보고 의아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국이 청년들에게 가혹한 나라라니?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국제 통계 지표는 우리나라가 ‘청년들이 살기 힘든 나라’, ‘청년층에게 유독 가혹한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5년 2월 발표한 고용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분기 한국 청년층(15~24세)의 고용률은 26.2%로 조사 대상 33개국 가운데 23위입니다. OECD 평균(39.7%)에 비해 13%포인트나 낮은 수치입니다. 한국보다 청년 고용률이 낮은 국가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대부분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 나라들입니다. 이들 특수 상황인 나라를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은 청년 고용률 최하위권 국가입니다. 그런데, 장년층(55~64세)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장년층의 고용률은 65.6%로 상위 9위입니다. 청년과 정반대로 상위권이죠. 게다가 이 고용률은 OECD 평균인 57.5%보다 오히려 8%포인트 이상 높은 것입니다. 이 상반된 결과를 놓고 보면 한국은 ‘장년층에게 관대하고 청년들에게 가혹한 나라’라는 진단이 과장이나 억측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지난 1997년 당시 통계를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534만 명이고 50~59세 연령층 취업자는 292만 명이었습니다. 이 때만 해도 청년층이 장년층보다 훨씬 활발하게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14년말에 확인해 보면 이 숫자가 대폭 바뀝니다. 청년 취업자는 387만 명으로 줄고 반대로 50대 취업자는 584만 명으로 두 배로 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들의 일자리가 150만 개 가까이 감소한 것이고 그 자리를 50대 이상이 채운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죠? 그리고 그 시발점이 된 것이 1997년 외환위기입니다. 이때부터 청년 잔혹사가 시



작된 것입니다. 역사의 시곗바늘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으로 돌려보기로 하지요.

## 박세리의 맨발 투혼과 노사정위원회 협상 타결

당시 분위기를 알기 위해 먼저 1998년 7월 7일로 가보지요. TV를 지켜보던 국민들의 환호 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제18회 US 여자오픈 결승전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당시 스물한 살인 박세리 선수가 한국 골프 역사상 첫 전미 대회 우승에 도전하고 있네요. 경쟁자인 추아시리폰 선수에 4타차로 밀리고 있던 박세리 선수가 18번 홀에서 친 공이 해저드로 빠집니다. 지켜보는 모두가 ‘우승이 물 건너갔구나’ 느끼는 순간 박세리 선수는 천천히 양말을 벗고 망설임 없이 차가운 해저드 물 속에 발을 딛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벙커 샷! 극적으로 위기를 탈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박세리 선수는 마침내 우승컵을 거머잡니다. 박세리 선수의 우승은 바로 전해에 발생한 외환위기로 실의에 빠진 온 국민들을 위로하는 경쾌한 쾌거였습니다. 소설가 유현종은 한 신문에 “국민에게 용기 준 한국의 딸이여” 라는 칼럼을 써서 박세리 선수를 격려했습니다. 이날의 우승이 단순한 스포츠 경기 이상의 의미로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왔던 것이지요. 그만큼 1998년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뒤숭숭하고 온 국민이 의기소침해 있던 때입니다.

한해 전인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대한민국 수립 후 처음 겪는 국가 부도 위기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외환 잔고가 텅텅 비어서 해외에서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까스로 부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한국은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부채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라는 IMF의 주문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요.

IMF의 구조조정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한자리에 모인 ‘노사정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들 경제 3주체가 한달 넘게 지속해온 협상은 1998년 2월 7일 타결에 이르게 됩니다. 모두 100여개의 과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정리해고의 법제화”였습니다.

노사정 위원회에서 정리해고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급속하게 정리해고와 기업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되고 이로부터 약 15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여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런데 정리해고는 기업이나 노동자 입장에서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기업으로서는 노조의 반발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밥그릇이 걸린 문제이니까요. 점차 재직 노동자들과 기업들은 묵시적 타협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 노사 간 극한 대립과 잠재적 타협

어떤 식으로 타협이 이루어져 나갔는지 예를 들어 현대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 6월, 현대차는 모두 4830명에 달하는 정리해고 계획을 내놓습니다. 당연히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하지요. 파업과 고공 농성 등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수습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당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노무현 부총재가 노사 중재를 위해 울산으로 급히 내려갑니다.

노조의 강한 반발과 따가운 사회적 눈총으로 현대차는 애초의 대량 정리해고 방침에서 한발 물러납니다. 결국 277명 정리해고를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가 도출됩니다.

4830명 해고 계획이 노사합의로 277명으로 줄었으니 노조 입장에서는 꽤 선방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시 노사 합의에서 기업은 구조조정을 최소화하는 대신 노조로부터 사내 하도급에 대한 동의를 얻어냅니다. 즉 인력이 필요할 때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비정규직에게 일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당시 노사간의 합의를 알기 쉽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존 인력 감축을 자제하는 대신 향후 기업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여 두 명 채용할 것을 한 명만 채용하고 그 한 명마저 비정규직으로 채우자”

기업은 자연적인 구조조정 효과를 노린 것이고, 노조와 기성세대 직장인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특히 노조의 영향력이 강했던 대기업 위주로 이런 경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움직임이 청년들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례에서 보듯이 대기업은 채용을 최소화하고 그나마 뽑아야 할 경우 경력직을 채용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정규직 채용의 80퍼센트 이상을 경력직으로 채웠습니다. 가장 안정된 일자리라고 하는 대기업 정규직의 상당 부분이 구세대 안에서 돌고 돌았다는 얘기고 그만큼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 세대의 몫은 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대신 임시직과 계약직, 일용직 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청년 세대에게 돌아가는 일자리 대부분은 비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외환위기 직후 1998년부터 청년들의 취업 대란이 구조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하는 첫 장면입니다. 기성세대가 자리를 지키는 대신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의 일자리가 희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래서 역사를 보는 긴 호흡이 중요합니다. 당장에는 기성세대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유리해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나 사회에 큰 손





실을 초래하는 근시안적인 일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청년 취업난은 그 이후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앞으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박세길의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



---

<박세길의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2>

2003년,

달콤 쌉싸름한 플라스틱 머니의 유혹

---

### 2003년, 달콤 쌉싸름한 플라스틱 머니의 유혹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

10여 년 전 유행하던 CM송의 첫 소절입니다. 어떤 상품의 CM송인지 기억하시나요? 아마 상품은 가물가물해도 노래의 유쾌한 멜로디는 금방 떠오를 겁니다. CM송은 이렇게 묘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광고음악계에서 역대 최대 히트송으로 꼽는다는 '오란C' CM송은 1970년대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일 때 나왔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가사가 기억에 선명합니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두 손에 담아 드려요~" 이렇게 시작하지요. 썸시봉으로 유명한 통기타 가수 윤형주 노래를 만들고 불러서 그런지 가사나 멜로디가 모두 매우 서정적입니다.(윤형주는 시인 윤동주의 6촌 동생이지요.) 소풍 가는 날 가방에 김밥과 사과 한 알 그리고 이 오란C 한 병을 챙겨 넣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이 뿌듯하던 기억이 새록새록하군요.

자 이제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노래는 2005년 대대적으로 전파를 탄 현대카드M의 CM송입니다. 그런데 오란C의 정겨운 추억과 달리 이 CM송이 연상시키는 기억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음악 취향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불과 2년 전인 2003년은 수많은 20~30대를 개인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킨 신용카드 대란이 발생한 해입니다. 그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이런 광고가 가는 곳마다 흘러나오고 있었으니, 사람들은 쓰게 입맛을 다시며 '아버지는 망하셨지, 인생을 즐기다' 라고 패러디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요. 청년을 위한 현대사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신용카드 대란'입니다.

2003년 신용카드 연체 문제가 집중적으로 터지면서 당시 신용불량자는 300만 명을 상회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그 뒤로도 계속 증가하여 최대 400만 명까지 불어납니다. 400만,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전 국민의 8%, 경제활동인구의 15%가 신용불량으로 금융 거래와 취업, 사업 등에서 제약을 받게 된 것이니까요.



카드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전 연령대에 걸쳐 있지만 특히 이삼십 대 청년층에 타격이 컸습니다. 40대 이상 세대는 당시만 해도 현금 위주 소비 생활이 일반적이어서 신용카드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신용카드가 대폭 확산되기 시작하는 2000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30대가 전체 카드 사용액의 41%를 차지합니다. 카드대란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불량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20대였습니다. 20대는 다수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학업을 마쳤더라도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취직이 극히 어려워 경제 소득이 미약한 처지였습니다. 아직 경제 개념도 부족한 이들에게 소비의 자유와 손쉬운 대출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플라스틱 카드 한 장으로 너무도 쉽게 손에 쥐어졌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 중 2030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12월 기준 48.8%에 달하게 됩니다.

## 저축 사회가 우선 쓰고 보는 사회로

왜 이렇게 단기간에 집중적인 카드 연체와 그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사태가 생긴 것일까요? 그 원인은 다시 1997년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은 철저하게 돈벌이에 초점을 맞추는 ‘금융회사’로 변신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금융회사가 아니었냐고요? 적어도 은행을 놓고 본다면, 금융회사보다는 ‘금융기관’에 더 가까웠습니다. 외환위기로 금융 자율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은행의 주요한 역할은 수익성을 올리기보다 국민경제에 자금을 유통시키는 공적인 임무가 강했으니까요. 단적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 국내 시중 은행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4.2퍼센트 정도였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2001년에는 이것이 15.9퍼센트로 뛴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수익 경영에 몰두한 결과이지요.

외환위기로 금융 자율화, 금융 선진화 등의 미명하에 고삐가 풀리면서 금융회사들은 경쟁하듯 돈장사에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금융사들은 외환위기 때 많은 기업에 부도가 발생하면서 기업 대출의 위험성을 톡톡히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비교적 쉽고 안전한 가계 대출, 개인 신용 대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우리 사회에는 개인이나 가계가 빚내는 것을 대단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계 저축률이 최상위권에 속하는 나라였으니까요. 금융사들이 가계와 개인 대상 대출을 늘리려면 다른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신용카드였습니다. 금융권은 반색을 했고 소비자의 지출 증대가 절실한 기업들과도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금융사들은 ‘신용 사회’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신용카드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기 시작



합니다. 이로 인해 외환위기 이전 평균 20~30퍼센트 수준이던 신용카드 발급 증가율이 2000년 48%, 2001년 58%로 폭등합니다. 그 결과 1999년까지 4000만 장이던 국내 신용카드 발급 수는 2002년에 간단히 1억 장을 돌파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정부는 신용카드 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1992년 2월 정부는 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 제한을 풀어줍니다. 이전까지 카드는 현금을 대체하면서 거래 기록이 자료로 남는 투명한 거래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컸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의 신용대출은 본연이 기능이 아니라고 보아 제한을 두었던 것인데 이 고삐가 풀린 것입니다. 5월에는 다시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하고 카드 발급 기준도 완화시킵니다. 내수를 부양시키기 위해 카드를 통해 소비를 부추기는 위험한 정책을 쓴 것이지요. 카드 사용 권장책은 계속 확대되어 2000년 1월에는 급기야 신용카드 결제시 복권을 자동 부여하는 정책이 나오기에 이릅니다. 카드에 별로 친숙하지 않던 국민들도 이쯤 되자 현금보다는 카드를 쓰는 게 더 유리한 소비 습관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사들이야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기회였죠. 신용카드 대출 경쟁이 촉발되었고, 신용카드 한 장으로 아무런 상담 없이 수천만 원까지 인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현금 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명칭도 다양한 각종 서비스로 카드사들은 개인 대출을 부추겼습니다. 이자율이 은행 대출보다 턱없이 높은 고금리 대출이었지만 국민들은 카드 대출의 위험성을 잘 몰랐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카드사들은 대대적으로 길거리 카드 발급에 나서서 저소득자나 주부, 수입이 전혀 없는 학생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카드를 떠안깁니다.

정신없이 빌리고 꺾 주다 보니, 신용카드 대출 잔액은 1998년 10조 원에서 2002년 하반기 무려 60조 원까지 급팽창합니다. 2003년이 되자 카드 대출의 상당 부분이 상환이 어려운 부실 대출임이 드러나지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곳곳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연체가 누적되면서 카드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3월부터 찾아왔고 11월에는 카드업계 수위를 차지하던 LG카드가 부도 위기에 처합니다. 카드사들이 방만하게 풀었던 대출 한도를 급속히 줄이고 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단기간에 이를 상환할 수 없었던 400만 명의 연체자들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여러분 부~자 되세요” 를 외치는 카드 광고, 서두에 언급한 흥겨운 CM송이 방송을 통해 거리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그러는 사이 “인생을 즐겨라” 던 그 카드 회사의 매출은 2004년 17조 6230억 원에서 2013년 73조 8498억 원으로 급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는군요.


## 소액 연체 청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지금이야 카드가 과소비의 한 주범이고 현금서비스가 엄청난 고리대금이라는 사실이 인지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카드의 무서움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소비를 부추겨댄 기업, 소득도 부족한 청년들에게 신용카드를 무제한 발급한 금융사들, 이를 감독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문호를 열어 주고 법규를 고쳐가며 방조하고 조력한 정부까지 온 사회가 돈의 광기에 휘말렸던 것입니다.

400만에 달했던 신용불량자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줄었지만 아직도 100만 명 이상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4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는 109만 7,437명이며 이 중 약 42%에 해당하는 46만 1,765명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라고 밝혔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5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은 기회를 주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부도 위기의 금융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168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또 2003년 카드대란 당시에는 LG카드에만 2조 원 등 7조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물론 이런 대처로 인해 금융 경색이 전체 경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 경제가 힘겹게 여기까지라도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따져볼 때 5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 연체자들에게는 우리 정부나 금융사들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닐까요. 그들 다수가 상환기간만 넉넉히 연장해주어도 충분히 갚아나갈 소액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오랜 기간 남모르게 신음하고 있을 이들 소액 연체자 중 대다수가 이삼십 대 청년들인데 말이지요. “신용은 개인 책임”이라는 말 한마디로 틀어막기엔 기성세대가 저지른 무분별함이 너무 부끄럽지 않은지요.

청년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되짚어보는 박세길의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2화를 마치겠습니다. 



---

<박세길의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3>

## 민달팽이 세대와

## 베이비붐 세대의 동행은 가능한가?

---

### 캥거루를 위한 변명

성인이 되고 학업을 마쳐 자립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젊은이들을 캥거루족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자면 캥거루는 다 자란 자식을 품 안에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태반이 없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발육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끼를 출산한 뒤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어미의 육아낭에서 ‘마저’ 기르는 동물 종류를 유대류라고 하는데 캥거루가 대표적이지요. 그러니까 어미 캥거루의 주머니는 일종의 인큐베이터인 셈입니다. 새끼 캥거루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어미 주머니를 벗어나 독립합니다.

최근 한 신문은 캥거루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캥거루족이 된 이유 즉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70%에 달하는 응답자가 ‘집값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서’ 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청년세대가 우리나라에는 자생하지도 않는 유대류 동물의 낙태임을 얻게 된 배경에는 이처럼 부동산 문제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제3화에서는 이 부동산을 둘러싼 청년들의 현실과 세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유독 요즘 청년세대에게 주거 부담이 심각한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군요. 예나 지금이나 내집 마련은 평범한 서민들에게 평생의 과제이자 꿈입니다. 돈을 벌고 모아서 집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집값이 싸냐 비싸냐 하는 것은 가계소득에 대비한 집값의 비율로 따집니다. 이를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to income rate)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PIR이 7이라고 하면 가계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7년을 모아야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13년 우리나라의 전국 주택 PIR은 23.4, 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 PIR은 47.5로 집계됩니다. 실로 엄청난 수치이지요. 부동산 대출을 얻지 않고 저축으로만 집을 사려면 23년,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47년의 소득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수치도 비현실적이지만 가계소득의 일부인 청년들의 소득만으로 따진다면 평생 과업이 아니라 대를 이어도 이루지 못할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존재하는 청년 현실에서는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으니깐요.

2014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의 소득을 100원으로 계산할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6원, 중소기업 정규직은 59원을 받고, 비정규직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1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미 1회에서 보았듯이 현재 한국청년세대의 실질 취업률은 OECD 최저 수준인데, 취업을 한 사람들마저도 20대의 80% 이상, 30대의 60%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을 사는 것은 고사하고 전세나 월세를 구해서 독립하려 해도 주거비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청년 취업난이 해결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호주 초원도 아닌데 때 아닌 캥거루 타령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빨간 바지들의 전성시대

과거 주택 보급률이 낮았던 시절,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은 주로 소득 계층 간 갈등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일부 부유층과 내 집이 없는 다수 서민들 간의 갈등이었죠. 국민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았던 1980년대 중반까지 서민들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주택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

다. 6월항쟁이 일어난 1987년의 경우 전국 주택보급률은 69.2%였는데, 서울로 한정하면 주택보급률은 50% 부근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두 가구 중 한 가구가 내 집이 없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1가구 다주택 보유자인 부유층과 투기 세력을 계산에 넣으면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주택의 비율은 훨씬 더 낮아집니다. 반면 권력과 유착관계에 있는 부유층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 추진된 국토개발,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로부터 얻은 고급 정보를 바탕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부동산 자산을 늘려나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66년부터 1968년 사이에 일어난 말죽거리 투기 열풍입니다. 1966년 제3한강교(현재의 한남대교)가 건설되면서 강 남단의 말죽거리 일대에 개발 열풍이 불었고, 평당 200~300원 정도였던 땅값이 1년 만에 3000원으로 뛰고 다시 1968년에는 6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 주도의 개발 정보를 입수하면 돈을 불리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는 인식이 권력층 사이에 널리 퍼지면서 이후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자 이러한 양태의 부동산 투기는 사회 저변을 흔들 정도로 극심해졌습니다.



이 당시 ‘복부인’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문 자가용을 몰고 채소밭, 땅콩밭 일색이던 강남 일대를 누비면서 개발 정보에 오르내리는 땅을 싹쓸이하는 사모님들을 일컫는 용어지요. 재력을 갖춘 이들은 남들보다 튀는 패션도 과감히 선보였는데, 일단의 복부인들은 빨간 뺨바지를 종종 입고 다녀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빨간바지’ 부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12.12군사반란과 5.17쿠데타로 수많은 광주 시민을 학살하면서 권좌에 오른 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또한 ‘연희동 빨간 바지’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초급 장교의 월급이란 것이 뻘한데 1958년 전두환 중위와 결혼한 이순자 씨는 8년 만에 서울 연희동에 떡 하니 자기 집을 마련하는 수완을 보였고 이후 부동산 건설 현장을 누비면서 40억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40억 원은 엄청난 돈이죠. 이순자 씨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의 퍼스트레이디가 되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재테크에서만큼은 단연 ‘퍼스트급’ 레이디였던 것입니다.

## 한 가정의 마지막 유서

이처럼 주택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소수 부유층에게는 막대한 차익을 거두는 기회요 대다수 서민에게는 주거비 폭등으로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주택값이 오르면 덩달아 전세값도 뛰고 대부분 전세를 살고 있던 서민들은 고통스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세값 파동이 가장 극심했던 1990년에는 한 해에 전세 가격이 전년 대비 16.8%나 치솟으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가장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졌고 신문들은 연일 이러한 소식을 크게 보도하곤 했습니다.

1990년 4월 11일자 <한겨레>는 전세값 폭등을 비판해 일가족 자살을 기도한 한 젊은 가정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오른 전세값을 마련할 길이 없자 방안에 연탄 화덕을 피워놓고 자살을 기도한 것입니다. 신문은 이 가정이 남긴 유서 내용도 일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옮겨보도록 하지요.

“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가난이 나에게도 물려졌고 기적이 없는 한 자식들에게도 물려질 것이다. 빈익빈부익부의 악순환이 끝날 조짐은 없다. 정치 지도자들은 가난한 서민들의 목을 더 이상 조르지 않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이상 급등은 강한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정부는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단속을 한다고 해도 투기꾼들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으로서 항상 새로운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면서 투기를





지속했고, 앞에서 보았듯이 정말로 큰 투기 세력은 관과 유착 관계에 있거나 때로는 권력 그 자체이기도 했던 터라 별 효과는 없었지만 말이죠.

## 세대 갈등으로 바뀐 주거 문제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상황도 바뀝니다. 2014년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103%, 전국 주택 보급률 역시 102.2%에 이릅니다. 수도권이 93.9%로 아직 부족한 상황이지만, 나라 전체로 주택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987년의 주택 보급률 69.2%에 비하면 상황이 많이 개선된 것이죠. 1가구 다주택 보유자를 고려하더라도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이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6월항쟁과 연이은 7~9월노동자대투쟁으로 소득 분배의 형평성이 증대되고 임금이 올라가면서 서민들이 집을 살 여력이 증가한 것도 주요한 요인이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세대라면 평수야 어쨌건 자가 주택 보유자가 꽤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이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해야 하는 수요는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부모로부터 독립해 살림을 차려야 하는 청년세대에 집중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 지형은 소득 계층 갈등에서 세대 갈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택 보유자가 많은 50대 이상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고 앞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해야 할 이삼십 대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희망하는 것이지요.

자기 집이 있다고 해도 상당수는 금융권 대출을 통해 주택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418조 원에 달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이 막대한 대출 잔액의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기고 깡통 아파트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국을 일단 모면하고 보자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결국 주거 안정이 아닌 거래 활성화를 부추기는 정책이 도미노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에 자기 집을 보유한 오륙십 대 이상의 기성세대가 집중적으로 장단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2012년 대선에서 아파트 가격 인상을 기대하며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2012년 대선이 세대 간 대결로 비화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 구도는 이처럼 이전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일부 투기 세력의 문제에서 세대 간 반목과 갈등으로 변했으니깐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기성세대가 풀 보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는 편안하게 잘살고 있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녀를 통해 청년세대 문제의 부메랑을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습니다. 입시와 스펙 경쟁을 위해 막대한 사교육비를 썼는데 졸업 후에도 실업자 신세인 자녀의 생활비를 부담하느라 가계 형편은 나날이 조들립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결혼 비용이 억 대에 이르니, 집 팔고 대출 얻어 겨우 자식들 시집 장가를 보내야 합니다.

결국 한국 노인 빈곤율은 50%에 육박하고 특히 여성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기성세대는 어렵게 도달한 중산층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을 뿐인데, 그 사이 자식 세대는 희생되고 정작 자신들의 노후조차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는 이런 바보 같은 게임을 벌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베이비부머와 에코 세대의 동행이 필요한 이유

우리 사회에서 50대의 주축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6.25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 합니다. 이들의 현재 연령은 53세부터 61세까지이지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베이비부머는 약 695만 명입니다.

이 베이비부머들이 성인이 되어 낳은 자녀 세대를 에코(echo) 세대라고 칭합니다. 산에서 ‘야호’ 소리치면 잠시 후 메아리가 돌아오듯이, 일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2세 세대라는 뜻이죠. 에코 세대는 구체적으로 1979년부터 1992년생, 현재 연령으로 18세부터 36세의 청년층이며 그 숫자는 954만 명입니다.

결국 주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청년세대와 부동산 가격 때문에 보수 후보에게 몰표를 던진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는 사회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인 셈입니다. 한쪽은 집 없는 민달팽이 세대이고 다른 한쪽은 집에 평생을 바쳐왔고 아직도 주택대출의 부담에 짓눌려 허우적거리는 초라한 기성세대입니다.

두 세대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쪽의 불행은 다른 한쪽의 고통이 되는 동반 관계이기도 합니다. 50대가 에코 세대를 캥거루라고 비웃고 청년세대가 50대 이상을 끈대라고 치부하면서 서로 반목하고 배척하는 한 국민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는 이 바보 같은 게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를 합하면 약 165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4.4%를 차지합니다. 지난 18대 대선 선거인 수는 4050만 명, 투표자 수는 3072만 명이



있는데요,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가 서로 뜻을 모은다면 전체 선거인의 40%, 투표자의 50%를 넘는 막강한 숫자가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협력적 동행이 꼭 필요한 까닭입니다.

연재 1화에 살펴본 청년 실업 문제, 2화의 카드 대란 문제, 그리고 이번 3화의 부동산 문제 등은 모두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는 결국 정치를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청년세대와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번 제4화를 통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박세길의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4>

## 위장취업과 학력세탁의 현대사

---

### 특출나게 일 잘하는 신입을 경계하라

다음은 ‘어느 문서’에 나오는 ‘특정 유형의 직장인’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 1) 근무시간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여 주위의 호감을 산다.
- 2) 인사가 밝고 명랑하여 누구나 친근감을 갖게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 3) 퇴근 후에도 술자리를 같이 하는 등 직원들과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

<미생>의 장그래 사원처럼 호감이 가는 유형이고, 이런 직장 동료라면 좋겠다고요? 그렇죠. 요즘 시대의 보편적 상식으로 본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 문서는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관계기관 대책회의’ 용으로 작성된 <좌경 위장취업자 색출을 위한 체크포인트>라는 문건입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란 5,6공화국 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공안 기관 관계자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열리던 회의를 말합니다. 국정원(당시 안기부), 검찰, 경찰의 고위 관계자들이 주 참석 멤버였죠. 이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사항이란 오로지 한가지. 어떻게 하면 국민의 민주화 열기를 짓누를까 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한 온갖 대책이 회의를 통해 만들어져 공권력에 하달되곤 했습니다. 요즘 또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여부로 시끄러운데요, 국정원의 해명을 국민들이 좀처럼 믿지 못하는 건 이처럼 오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특정 유형의 직장인’이란 제가 요즘 용어로 풀이한 것입니다. 문건에 적힌 그대로 옮기자면 ‘위장취업자’입니다. 당시 위장취업은 대개 대학생 출신이 노동운동을 위해 학력을 속이고 생산직 노동자로 취업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공안통치로 유지되던 5,6공화국은 항상 반정부 투쟁에 선도적인 대학생들에 이어 노동자들이 민주화 운동에 합세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이 문건은 그러한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서슬이 퍼렇던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위장취업을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만한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학력을 속이고 취업한 사실만으로도 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 비밀리에 진행된 일들이니까요. 위장취업으로 구속되거나 해고된 사건들만 매년 수 십에서 수백 건씩 발생했으니 5,6공화국을 통틀어 그 수가 수천 명에 이르고 발각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면 그 몇 배에 달하는 규모였다고 추정할 밖에요.

또 하나 간접적인 추정 자료로 이른바 ‘블랙리스트’ 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 출신 노동자와 해고자, 적극적인 노조 활동자 등을 명기한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를 공단 지역의 각 사업장, 노동부 근로감독관실, 정보기관에 돌리고 거기에 이름이 오른 이들을 아예 취업시키지 않거나 취업 면접을 오면 바로 공안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 이런 블랙리스트는 지역 및 사업장마다 다른 여러 종류가 존재했습니다.

### 1991년 노동자 블랙리스트 사건

1991년 9월 16일 부산의 신발 제조업체인 금호상사에서 전산작업을 하고 있던 한 노동자는 전산실에서 이상한 명단이 담긴 디스켓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리스트에는 약 8천 명의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등재되고 특기사항 란에는 전국의 대학 운동권부터 시국사건 관련자, 해고자 등 개인별 신상명세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동운동계에 소문으로 떠돌던 ‘블랙리스트’ 의 실체가 발견되는 순간이었죠.

특정인을 블랙리스트에 넣어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한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배격하는 일입니다. 당시 노동운동계와 재야, 시민운동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를 실시했지만, 대부분의 정치적 사건들이 그렇듯이 그 실제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신발업계 관계자들이 자료 원부를 안기부와 경찰에서 넘겨받았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들은 끝내 발뺌으로 일관했지요.

20여년 전 직장에는 ‘근무시간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며 인사성이 밝고 명랑하여 누구나 친근감을 느끼고 퇴근 후에도 동료들과 함께하기를 즐기는’ 내 주변의 누군가를 경계하라는 지침과 감시가 실존했던 겁니다. 예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문서는 “입사 3개월 정도의 신입사원이 유난히 특출나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는 세심한(?) 권고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누리는 노동 환경이 아직도 미진함이 많지만, 그나마 이 수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의 굴곡을 거쳐왔는지, 실감 나는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훌쩍 흘러 21세기를 사는 우리 앞에 또 다른 유형의 ‘위장취업’ 소식이 종종 들려옵니다.

## 하향 지원, 몸값 낮추기에서 ‘학력 세탁’ 까지

2012년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311명에게 학력 하향 지원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63.3%가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곳에 지원한 경험이 있다’ 고 응답했다고 하네요.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곳에 입사지원을 한 이유(복수응답)를 살펴보면, ‘일단 취업을 하는 것이 급해서’가 70.6%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실시된 취업포털 사람들의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학력을 낮춰 지원한 구인자 가운데 최종학력별로 ‘대학원 이상’ (32.9%), ‘4년제 대학’ (30.1%), ‘전문대학’ (26.6%)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직자가 자신의 학력을 의도적으로 감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물론 이는 예전의 위장취업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를 ‘일자리 하향 지원’ 이라거나 ‘학력 세탁’ 이라고 표현하는군요. 학력을 낮춰 입사했다고 해서 바로 해고되거나 구속되는 것도 아니니 1980년대나 1990년대의 위장취업과는 다르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학력을 감추거나 낮춰서 취업을 단행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학력 세탁은 2010년대로 오면서 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고졸자만 뽑는 대기업 생산직 모집에 대졸자들이 학력을 속이고 몰려드는 현상도 오래 전부터 발생했습니다.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환경미화원 신규 모집에 대학 졸업자들이 대거 몰렸다는 기사도 이젠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스스로 몸값을 낮추는 대학 졸업자들 또한 부지기수이지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3 워크넷(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통계연보’ 에 의하면 지난 2013년 워크넷을 통해 구직을 신청한 총 4만2346명의 대졸자(4년제)들의 월평균 희망임금은 205만8000원으로 같은 기간 구인업체들이 제시한 평균 제시임금인 210만1000원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희망은 언제나 현실보다 높아야 하지 않을까요? 대졸자의 희망임금이 기업들의 제시임금을 밑돌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라고 합니다.

학력을 감추고 임금을 낮추고 입사지원을 할 정도이면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예전과 다른 것도 당연합니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2014년 전국 20대 이상 구직자 25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30.2%가 중소기업을 선호하여 공기업과 대기업을 누르고 선호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선호자 중 20대가 62%로



가장 높았으며 학력별 비교에서도 대학 재학생 및 대졸자의 중소기업 선호도가 62%로 고졸 응답자 32.1% 보다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이태백들이 눈높이만 높아서 공기업, 대기업만 선호한다” 는 세간의 일부 차가운 시선들과도 정면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요즘 중소기업 구인난의 핵심은 고졸 기술직 이지 대졸 사무직이 아닙니다.

## 한국사회에서 취업은 가족 프로젝트

물론 여전히 청년 구직자들은 대기업과 공기업의 문을 열심히 두드립니다. 매년 50여만 명에 이르는 대학 졸업자들 중 삼성 그룹 입사에 도전한 수가 20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삼성의 한해 국내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4000~4500명 정도에 불과한데 말이지요. 지난 6월에 실시된 서울시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13만 명이 응시하여 5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왜 이런 선택이 이루어졌는지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동안 대기업으로의 부의 집중은 나날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삼성·현대자동차·LG·SK 등 4대 그룹의 1년 매출이 우리나라 GDP의 60%에 이릅니다. 10년 전 이 숫자는 40%였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 간의 임금격차를 보면 문제가 한층 명확해집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을 100이라고 할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4, 중소기업 정규직은 52,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은 국민연금(가입률 99.6%)과 건강보험(가입률 100%)의 혜택을 대부분 누리지만 중소기업·비정규직 직장인들은 국민연금(42.5%), 건강보험(46.6%) 가입률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청년세대의 취업은 대부분 순수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가족 프로젝트’ 로 추진됩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자녀를 경제적으로도 독립시키는 서구와 달리 우리는 대학 진학과 졸업, 취업, 결혼에 이르기까지 부모가 깊이 개입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부모 세대는 청년세대의 진로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청년세대의 치열한 취업 전쟁에는 부모 세대의 시각과 욕망이 깊숙이 투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결과를 조성한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의 자세만 탓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성격은 많이 다르지만 1980년대의 위장취업과 2010년대의 학력세탁 취업 모두 비정상적인 사회가 낳은 산물입니다. 비정상적인 사회의 단단한 벽은 항상 청년들이 먼저 두드립니다. 그러나 청년세대만으로는 결코 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벽이 허물어지기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의 손을 맞잡아 주어야만 합니다.

한국사회는 1987년 6월항쟁에서 이를 감격스럽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전 투경찰과 최류탄 연기와 가득한 거리로 나섰을 때 3040 직장인들은 사무실 빌딩 창문



을 열어 두루마리 휴지를 던져주고 5060 택시기사와 승객들은 경적을 울리며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수십년 군사독재의 철용성이 무너진 것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문제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독 심각한 한국의 청년 취업난과 맥을 잃고 헤매는 한국경제의 현실은 이제 우리를 가로막는 단단한 옹벽이 광화문과 시청에만 둘러쳐진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동행이 절실한 때입니다. 🇰🇷





<박세길의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5>

## 왜 청년들은

## 노동운동 밖으로 밀려 났는가?

얼마 전 정의당 대표 경선에 38세 청년 정치인 조성주가 출마해 ‘민주주의 밖의 시민, 노동운동 밖의 노동자’ 를 대변하겠다고 공표해 많은 사람들의 동감을 얻은 바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란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구현하는 것이고 노동운동은 억눌리고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에서조차 배제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지금의 청년세대가 특히 그렇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다는 한국사회에서 왜 다수 청년들은 노동운동 밖의 노동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 노동운동 밖의 노동자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40분, 한 청년이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근처 국민은행 앞길로 뛰어나가며 무어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몸은 전신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흑사하지 말라!”

그는 몇 마디의 구호를 짐승의 소리처럼 외치다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품에서 근로기준법 책이 함께 불타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당황하여 불을 끌 엄두도 내지 못했고, 3분쯤 지나 불길이 꺼지자 쓰러진 그 청년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차마 형용할 수 없는 참혹한 모습으로, 그는 마지막 남은 생명의 힘을 다 짜내 울부짖었습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직업 - 평화시장 재단사, 나이 - 24세, 이름 - 전태일.

이렇게 스물넷의 젊은 청춘은 채 피지도 못하고 평화시장 앞길에서 한 점 불꽃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몸담았던 평화시장의 근로 환경은 요즘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



려우리만치 열악했습니다. 약 2천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음에도 화장실은 단 세 동뿐이었습니다. 슬픈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시설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관리자들에 눈치를 보느라 화장실마저 제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섬유 산업 노동자는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는데, 그들의 처지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통풍 시설도 제대로 안 된 좁은 작업장에는 옷감에서 떨어져 나온 실밥과 먼지가 수북이 쌓였고 노동자들은 점심시간이면 일하던 자리에 그대로 앉아 먼지가 허영게 내려앉은 도시락을 먹어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먼지를 들이키면서도 화장실 가는 걸 피하기 위해 물조차 마시지 않고 일하다 보니 기관지와 폐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노동 시간은 작업량이 비교적 적은 여름을 제외하고는 하루 14~15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아침 8시 반 출근 밤 11시 퇴근이 일반적이었고 일거리가 밀리면 야간작업이 다반사였습니다. 업주들은 어린 시다(미싱 보조사)들에게 잠 안 오는 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놓아 가며 밤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한 달 통틀어 휴일은 첫째 셋째 일요일 단 이틀이지만 그나마도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토록 고생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1970년에 전태일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다가 월 1,800~3,000원, 미싱사가 7,000~2만 5,000원, 재단사가 1만 3,000~3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창 어리광 부릴 열서너 살 나이의 시다가 받는 일당이 70~80원 풀이었습니다. 당시 라면 한 봉지가 20원 하던 때였으니 온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겨우 라면 서너 봉지 정도를 살 수 있었던 셈이지요.

## 18년 만에 합법화된 청계피복노조

아무도 이런 열악한 상황을 돌보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노동법과 노조라는 틀 밖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전태일은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것이지요. 전태일의 육신을 태운 불꽃은 수천, 수만의 새로운 불꽃을 만들어냈습니다.

분신 보름 뒤인 1970년 11월 27일 그의 유지를 이어받으려는 노동자 500명이 모여 연합노조 '청계피복지부'를 결성합니다. 이 노조는 한국전쟁과 5.16군사 쿠데타를 거치며 거의 모든 자발적 노조가 해산되고 관제, 어용 노조만 남은 상황에서 다시금 민주노조 운동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효시였습니다.

전태일의 죽음으로부터 다시 시작된 한국 노동운동은 1980년대에 일대 도약을 맞이합니다. 많은 학생운동 출신자들이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 활동했고 이를 바탕으로 1984



년 무렵부터 서울 구로공단을 위시해 전국 곳곳에서 민주노조가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의 탄압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민주노조 대부분이 파괴되고 말았고 내로라하는 노동운동가들은 한국 사회에서 민주노조는 장기간 불가능할 것이라며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1~2년 뒤에 이 모든 예상을 뒤엎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987년 6월 전국은 연일 민주화 시위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민주화 시위 물결은 국민 이기는 정권 없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민주항쟁은 승리를 거두었고 헌법 개정과 함께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승리는 노동자들에게 강렬한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그래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며 침묵과 냉소로 일관하던 노동자들이 일순간에 자신감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민주항쟁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인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은 노동자투쟁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7·8·9월 노동자대투쟁이 폭발해 오른 것이지요. 대투쟁을 거치며 새롭게 결성된 노동조합은 무려 1060개에 이르렀습니다.

전태일의 뜻을 이어받은 청계피복노조가 합법적 지위를 얻은 것도 이 무렵입니다. 1970년에 설립한 청계피복노조는 전태일의 죽음 이후로도 18년에 이르는 투쟁을 통해 1988년 비로소 합법화되어 노조 신고 필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노조는 두 차례나 강제 해산당하고 간부들의 구속과 수많은 조합원, 노동자들의 연행 등 눈물과 땀과 피로 얼룩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지표면을 뚫고 나온 노동자의 투쟁 에너지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끈질긴 것이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노동조합은 지역, 업종, 그룹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연대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1995년 산업·업종조직과 지역본부 체계를 갖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 민주노총의 영광과 좌절

민주노총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어 자신의 실력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1996년 말 김영삼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자 총파업으로 응수해 격퇴했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민주노총이었지요. 정부를 상대로 승리한 민주노총은 국민의 자부심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찬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순간까지 노동운동의 역사는 자부와 긍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민들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에 적극 지지를 보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노동운동은 민주



주의를 지키는 가장 확고한 보루였습니다. 민주노총 사업장이 임금을 올리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덩달아 임금이 올랐습니다.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걱정되어 사용자들이 알아서 올려 준 것입니다. 그렇게 임금이 오르면 노동자들의 소비 지출이 확대되어 지역경제도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래저래 민주노총이 잘되면 국민의 삶도 함께 개선되는 선순환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며 사정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민주노총은 정리하고 도입과 비정규직 양산을 뒷받침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법제화에 동의하였습니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거세가 몰아치는 가운데 노동현장은 나부터 살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민주노총 조직은 소속 노동자의 협소한 자기 이익을 지키는 도구로 전락해 갔습니다.

사용자들은 강력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씨름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웬만큼 수용했습니다. 대신 두 가지 방식으로 보충해 왔습니다. 하나는 협력업체를 최대한 쥐어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크게 심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 두 명 채용할 할 것을 한 명으로 줄이고 그 한명을 비정규직으로 뽑는 식의 자연적 구조조정 효과를 노렸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은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흘러들어가거나 그마저 어려워 실업자로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문제는 자기 이익 지키기에 급급한 노동조합이 이러한 상황에 극히 둔감하거나 애써 외면했다는 데 있습니다. 단적으로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같은 사업장 노동자임에도 비정규직의 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소득 수준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노동운동의 결실을 충분히 누린 것이지요. 반면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망은 빠르게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독자적으로 모색되었으나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주요 구성 요소인 파견직은 실질적 고용주인 원청업체가 협상에 응하지도 않습니다. 계약직 역시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기에 협상력이 극히 취약합니다. 또 적지 않은 비정규직 청년세대는 지금의 사업장을 잠시 머무는 곳으로 사고하면서 노동운동에 소극적 자세를 보입니다. 비정규직 조직화가 잘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지요.




## 열정페이와 평화시장 노동자

비정규직 신분이라도 규모가 큰 회사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노조는 꿈도 못 꾸지만 회사 전체적으로 노동법은 지켜지는 상황이니깐요. 그런데 주로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청년들은 노동법에서 규정한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에게 부당한 착취를 일삼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경험과 경력을 쌓으려는 청년들에게 인간 이하의 모멸감을 주면서 하인 부리듯이 써먹는 일부 ‘어르신’들의 사례가 종종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인턴제나 열정페이라는 말 뒤에 1970년대 평화시장 어린 노동자들의 처지가 오버랩됩니다.

한국은 식민지를 경험했으면서도 보기 드물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라고 합니다. 민주화의 성공이 빚어낸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서 노동운동 활성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세대의 다수는 그 성과를 함께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민주주의의 밖의 시민, 노동운동의 밖의 노동자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청계 피복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한 청년이 죽음으로 고발하고 그로부터 18년을 싸워 노조 합법화를 얻어낸 과정을 한국 현대사는 아프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또 다시 그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가 1970년대보다는 현저하게 민주화되고 발전했다고 자부한다면, 이제 소외된 청년들의 권리를 누군가의 죽음이나 처절한 투쟁 이전에 사회적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

<박세길의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6>

## 투표율 낮다고? 희망은 청년들이다

---

### 20대 ‘개새끼’ 론의 진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압승한 2012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제19대) 직후 인터넷과 SNS상에는 20대 투표율에 관한 루머가 엄청나게 유포되었습니다. 20대 투표율이 27%에 불과하며 특히 20대 여성 투표율은 8%라는 내용이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루머는 인터넷을 달구었습니다. ‘투표도 안한 20대는 앞으로 등록금 비싸다고 징징대지 마라’, ‘투표일에 여의도 벚꽃놀이나 즐긴 너희들은 나라 비판할 자격도 없다’ 등 온갖 비난이 20대와 여성들에게 쏟아지면서 이른바 ‘20대 개새끼’ 론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땠나요?

선거 후 두 달이 지난 6월 26일에 나온 중앙선관위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분석」 자료집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대 투표율은 20대 전반이 45.4%, 20대 후반이 37.9%로 거의 괴담 수준으로 나돌던 인터넷 루머 27%와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게다가 20대는 그 직전인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모든 연령대 가운데서 투표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대 여성들의 투표율이었습니다. 8%라고 떠돌던 여성 투표율은 뚜껑을 열어보니 20대 전반 40.4%, 20대 후반 39.5%로 높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의 여성 투표율은 같은 연령대 남자들보다도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대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 남성 투표율보다 여성 투표율이 높게 나옵니다. 이를 고려하면 19대 총선에서 2030 여성들의 높은 투표 참여율은 대단히 인상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20대 전체 그리고 20대 여성들의 정치적 참여 증대입니다. 그런데 가장 칭찬받아 마땅할 20대와 여성들에게 온갖 비아냥이 쏟아진 게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 단순한 해프닝이었을까?

루머와 실제의 차이는 무엇까요? 단순한 오해로 생긴 해프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 벌어진 일이 아니고 상습적 반복이니까요.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압승한 이후로 20대에 대한 이런 억측과 분풀이는 매 선거마다 반복되었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대 투표율 19%라는 루머가 떠돌았습니다. 19대에 와서 27%로 올려준 것을 그나마 수치라도 나아졌다고 반겨야 할까요?

보수가 승리한 선거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언론은 젊은 층의 낮은 투표율을 반드시 언급했고 트위터 등 SNS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오피니언리더라는 사람들이 질타하거나 또는 점잖게 안타까워하는 투로 20대의 낮은 투표율을 들먹였습니다.

2007년 대선 이후 대선, 총선, 지자체선거 등 모든 전국 단위 선거를 새누리당(한나라당)이 석권했습니다. 진보 후보의 당선을 바라던 시민들에게는 분통 터지는 일이지요. 문제는 그때마다 20대와 여성들을 애꿎은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두 번도 아니고 지난 10년간 보수가 승리한 매 선거마다 이런 식이라면 이젠 자못 심각한 정신병리 수준이 아닐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루머는 좀 심했다 하더라도 연령대별로 20대 투표율이 가장 낮은 건 사실 아니냐?”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20대가 가장 낮지요. 그런데 언제는 안 그랬나요? 제가 투표권을 처음 행사한 게 1985년 2.12총선인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항상 전체 연령대 가운데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단 한번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1991년 6월 15일자 한겨레신문 기사를 살펴볼까요?

“선거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던 3월 26일의 시군구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20대는 서울의 경우 4명 가운데 3명이, 직할시에서는 3명 가운데 2명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등 20대의 선거 무관심과 기피 현상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이면 1987년 6월항쟁이 벌어진 지 불과 4년 후입니다. 당시 20대는 요즘 말하는 486세대입니다. 민주화의 주역인 486세대가 20대이던 시절, 게다가 민주주의에 대한 열기가 한참 뻗어나가던 그 시기에조차도 20대 투표율이 제일 꼴찌라는 사실은 지금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에 ‘20대 때문에 선거가 안 풀려’ 라거나 ‘투표 안 한 너희들은 민주화니 뭐니 떠들지 마’ 라는 악담은 없었습니다. 왜냐? 1980년대 민주화 투쟁에서 당시 20대(현재의 486)의 기여에 대해 부인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486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공적으로 일종의 훈장을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낮아도 적어도 욕을 먹지는 않는 거죠. 여기까지는 나무랄 바 없습니다. 우리 역사의 전진에 기여한 세대에게 그 정도 예우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훈장 하나 달았다고 해서 자신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20대를 나무랄 권리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닙니다.

## 사회 전반의 보수화를 견제한 2030

자 그럼에도 “어찌됐든 예전보다 20대 투표율이 자꾸 떨어지면서 보수 정권 출범에 일조한 거 아니냐?” 라는 반박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고정관념에 불과한 것인데 마저 살펴보지요.

이같은 생각은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젊은층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고 낮아지면 여당이 유리하다는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아래 표는 15대부터 18대까지 역대 대선의 전체 투표율과 20대 투표율 그리고 당선자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전국 투표율(a)	20대 투표율(b)	격차(a-b)	당선자(정당)
제15대 선거(1997년)	80.7%	68.2%	12.5%	김대중(새정치국민회의)
제16대 선거(2002년)	70.8%	56.5%	14.3%	노무현(새천년민주당)
제17대 선거(2007년)	63%	46.6%	16.4%	이명박(한나라당)
제18대 선거(2012년)	75.8%	65%	10.8%	박근혜(새누리당)

전체 투표율과 20대 투표율 간 격차(a-b)가 가장 컸던 때는 이명박 후보가 승리한 2007년 대선이었습니다. 이 17대 대선 결과만을 놓고 보면 20대의 낮은 투표율이 보수 후보 승리의 주요한 요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양자간의 격차가 가장 작았던 선거는 바로 지난 2012년 대선이었는데 역시 보수 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20대 투표율이 크게 올라 격차가 가장 적었음에도 결과는 보수의 압승이었던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제15대와 16대 대선에서 전국투표율과 20대 투표율의 격차는 이 두 선거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즉, 20대 투표율이 대선 결과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수 후보 당선이 20대의 낮은 투표율 때문이라고 탓할 근거가 없고 더군다나 이로 인해 20대가 욕을 먹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20대 투표율이 오른다고 진보적 후보가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구요? 일단 인구 구성비의 변화로 2030세대보다는 50대 이상 기성세대의 인구 비중이 높습니다. 청년세대가 진보나 야당 지지 성향이 높더라도 훨씬 숫자가 많은 기성세대의 보수화가 크다면





선거 결과는 보수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지난 3화에서 살펴보았듯이 특히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적 요인으로 선거가 세대 대결 양상을 띠게 됨으로써, 청년세대가 결집하고 투표 참여 의지를 높일수록 보수적 성향의 기성세대 또한 더 바짝 긴장하고 대거 투표에서 결집하게 됩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전국 투표율은 12% 정도 상승한 데 비해 20대 투표율은 거의 20% 가까이 상승했고 이들 가운데 다수가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50대와 60대는 물론 투표율이 가장 높지만 직전 선거들에 비해 투표율 자체가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5060세대는 압도적인 박근혜 후보 몰표로 결집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박근혜 후보는 1987년 6월항쟁으로 대통령 선거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 보수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51.55%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1987년 이후 대선에서 보수 후보가 50% 넘는 지지를 받은 것도 박근혜 후보가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최근 두 차례의 선거(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확인되는 바는 50대 이상 세대의 압도적 보수화를 40대 이하 연령대가 단합해도 막아내기에 버거운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 와중에 그나마 희망은 2030세대의 진보적 성향이 강화되고 투표 참여율이 적극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입니다. 사회 전반의 확연한 보수화를 청년들이 견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청년세대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흔한 통념과 달리 향후 한국 정치의 희망은 이들 청년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투표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년세대를 폄하하고 시시때때로 분풀이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태도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들을 질타하는 기성세대가 과연 청년들에게 정치 참여를 불려일으킬 만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는 한걸까요? 19대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53.88세입니다.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486세대가 이미 국회에 다수 진출해 있고 2017년 개원할 20대 국회에서는 이들 486세대가 전체 의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국회에 입성한 그 많은 486들 가운데 기존의 기성세대들과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정치의 감동을 선사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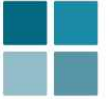
## 청년세대 정치의 ‘맛’ 에 눈뜨다

새로운 희망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2030에게서 발견됩니다. 지난 18대 대선은 청년 세대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표출한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세대가 제대로 정치의 맛,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지요. 자신의 정치 참여가 정치와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정치 효능감’ 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정치 효능감이 클수록 정치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는 486세대가 이 정치 효능감이 가장 뛰어나다고 인식되었습니다. 이제 그 뒤를 청년세대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숙명여대 박제신의 석사학위 논문 <한국 대학생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2년 조사 대상 대학생의 정치 효능감은 45.4%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2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 해당 수치가 61.7%로 상승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벌어진 2007년 촛불시위는 청년 세대가 이런 정치 효능감에 눈을 뜨기 시작한 계기였습니다. 촛불시위는 초기 국면에서 십대들이 먼저 주도하고 여기에 점차 20대와 기성세대가 동참하는 방식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당시 십대와 이십대들이 현재 2030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정치의 변화를 추동할 양팡 테리블입니다. 기성세대는 가르치려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잘 지원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는 언제나 청년세대의 발걸음과 함께 전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

<박세길의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7>

##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

### 영화 ‘암살’ 과 청년들의 독립운동

휴일을 이용해 딸아이와 함께 화제의 영화 ‘암살’ 을 관람했습니다. 이 영화는 일제시대를 다룬 영화는 흥행이 어렵다는 기존 통념을 깨고 대박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이어지는 액션 장면도 매력이지만 안옥윤(전지현), 염석진(이정재), 하와이 피스톨(하정우) 세 주인공의 운명이 엇갈리며 전개되는 스토리가 흥미진진합니다. 영화에는 친일파 암살 거사를 이끌어가는 두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김구와 김원봉이 바로 그들입니다. 김구는 누구나 다 아는 민족 지도자인데 김원봉은 생소한 분이 많을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수많은 애국지사가 만주 지역으로 건너가 무장단체를 조직하고 일본군과 맞서 싸웠는데 그중 하나가 의열단입니다. 의열단은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13명의 청년이 모여 결성한 단체입니다. 의열단이라는 이름은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한다'는 뜻인데 자신들의 목표를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총독과 고관 등 일제의 높은 관리, 군부의 중요한 인물, 매국노와 친일파의 우두머리, 독립투사의 계획이나 형편을 일본 경찰에게 몰래 보고하는 밀정과 반민족적 행위를 일삼는 부자들을 비밀리에 살해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찰서와 주요 기관을 파괴하여 일제에 피해를 주는 것 또한 우리 의열단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초기 의열단 단원들은 주로 만주 지방에 세워진 독립군 양성 기관인 신흥무관학교 출신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영화 ‘암살’ 에 등장하는 속사포(조진웅)도 이 학교 출신으로 설정되어 있지요. 단장으로서 의열단을 이끈 인물이 앞서 언급한 약산 김원봉입니다. 김원봉이 의열단 단장을 맡았을 때의 나이가 22세였습니다. 말 그대로 파릇파릇한 청년이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이 앞장서서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일군 주축 역시 대부분 10대에서부터 20대로 구성된 청년들이었습니다. 의열단만 젊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항일조직의 주축이 청년들이었지요.

##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고종21년인 1884년 당시 조선은 허약한 조정과 제국주의 열강들의 노골적인 한반도 진출 야욕으로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이 와중에 조정 내의 수구파들은 조선을 속방으로 만들려던 청나라에 기대어 정권의 안일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복고적이고 역사 퇴행적인 행위로 간주한 급진 개화파는 변란을 통해 정치 정세를 단번에 뒤집으려 합니다. 이들은 그해 12월 8일 우정총국 개막식을 이용해 수구파를 제거하는 거사를 단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성공했다면 혁명이 되었겠지만 3일천하로 그쳐 정변이라 이름 붙은 이 거사를 조직적으로 이끈 김옥균은 당시 나이 불과 33세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기업체 대리나 과장급 정도 나이에 불과한 청년이 내각을 구성할 예비 조직을 짜고 무장 병력을 동원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려 들었던 것입니다. 리더가 것처럼 젊었으니 김옥균을 따르는 나머지 인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요한 역할을 맡았던 박영효가 스물세 살, 서재필은 불과 스무 살이었지요.

##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꽃

청년들의 역할은 해방 이후 민주화운동에서 더욱 화려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신군부의 야수적인 학살 행위로부터 촉발된 1980년 5.18광주민주항쟁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남은 자로서의 부채의식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가장 열정적이면서 치열하게 반응하였던 것은 청년학생들이었습니다. 광주민주항쟁의 세례를 받으며 학생운동이 세계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리만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신화가 창조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켰고 마침내 1987년 6월항쟁으로 온 국민의 의지가 결집되었습니다.

민주화투쟁이 승리로 장식된 지 2년 뒤인 1989년 청년들은 또 하나의 신화를 창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임수경이 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평양축전(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를 결행한 것입니다. 임수경 대표는 6월 21 서울을 출발,



도쿄와 서베를린을 경유하여 6월 30일 평양에 도착하였습니다. 자동차로 불과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을 꼬박 열흘이나 걸려 간 것입니다. 임수경 대표가 평양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처음으로 마주친 것은 평양 시민의 엄청난 환영 열기였습니다. 수십만의 평양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임수경의 뒤를 따랐습니다. 임수경은 수려한 외모, 거침없는 행동, 감동적 연사 등으로 남과 북 모두에서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습니다.

임수경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지역으로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연행되어 구속되었고 이후 5년간에 걸친 긴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임수경의 방북은 철옹성 같은 분단의 장벽에 커다란 균열을 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년학생을 중심으로 민간 통일운동이 급격하게 고조되었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됨에 따라 임수경을 구속했던 노태우 정부 또한 남북 관계에서의 전향적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이 이어지고, 1992년 지바 세계탁구대회에는 남북 단일팀으로 참여해 우승을 이끌어내는 감동적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랜 숙제로 남아 있던 남북 유엔동시가입을 성사시킨 것도 이런 분위기 덕분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압축적으로 확인했지만 우리 근현대사의 구비마다 청년들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꽃이 바로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청년세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들이 그간 빛나는 역사적 전통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의 청년세대는 역사의 새로운 국면을 열지 못한 채 현실에 순응하는 나약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러나 이는 노파심에 가까운 기우일 뿐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달라져도 여전히 역사의 새로운 물길을 여는 일은 청년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으로 촉발된 2008년 촛불시위이지요.

## 새로운 역사에 걸맞는 새로운 세대의 출현

약 100일 간에 걸쳐 연인원 300만 정도가 참여한 촛불시위를 주도한 것은 10대와 20대를 주축으로 한 청년세대였습니다. 처음 촛불시위를 제안한 주창자들이 ‘촛불소녀’라 불린 여중생들이었고 10대와 20대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 시위를 전파하고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청년세대는 자신들의 고유한 속성을 거침없이 발산함으로써 촛불시위를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시위로 이끌어갔습니다. 촛불시위는 지극히 개방적이고 수평적이며 다양성이 극대화된 시위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을 정도로 엄청난 폭발력을 과시했지요.



촛불시위는 잘못된 정책과 무책임한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저항의 차원을 넘어 탈산업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주역의 데뷔무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세계는 산업혁명으로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이어져온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탈산업사회에서 가치 창출의 주요 원천은 사람의 창조력인데 창조력은 개방적이고 수평적이며 다양성이 구현되는 환경에서 극대화됩니다.

촛불시위에서 드러난 청년세대의 지향은 이러한 탈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 쟁거루족 신세를 면치 못하는 존재로 보았던 청년들이 이전과 다른 형태의 새로운 움직임을 담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미국의 SF 소설가 윌리엄 깁슨의 명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새로운 싹이 발아하여 줄기를 뺏고 가지를 펼쳐 무성한 그늘을 만들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1980년 광주의 고립된 항거가 전 국민의 항쟁인 6월항쟁으로 승화하기까지 7년이 필요했고 1970년 청년 전태일의 분신이 노동자대투쟁으로 폭발하기까지 17년의 세월이 필요했듯이 말이지요.

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세월의 두께가 아니라 새로운 걸음을 나선 청년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지지와 호응입니다. 일제시대 2.8독립선언과 3.1운동, 광주학생운동, 청년들의 항일 무장투쟁에 기성세대가 전폭적으로 동참하면서 해방 후 나라 만들기의 열풍이 전국에 몰아쳤고 그 힘이 결국 민주화와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대학생들의 민주화투쟁에 3040 직장인들이 호응하고 5060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5공화국의 폭압적 독재를 무너뜨리고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싹을 보인 데 불과하고 충분히 여물지 않았을지라도 결국 새로운 역사는 청년들이 물꼬를 트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성세대는 이들의 긍정적인 면을 적극 격려하고 청년들이 부족한 점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역사의 과제들을 함께 극복해 가야 합니다.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시절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자주 쓰이던 말이 있습니다.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청년의 눈빛을 보게 하라”

이 슬로건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역사는 따로 있다’ 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애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



우리 사회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진보적 정책 자산을 늘려나가는  
새사연의 [잇:북]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